

북한정권 수립 60주년: 과거, 현재, 미래

전 현 준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1948년 9월 9일 북한정권이 수립 된 후 벌써 60년이 흘렀다. 60년 동안 북한에서는 각 부분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해방이후 연합군에 의해 설정된 3·8선 이북에는 소련군과 공산주의자들이, 3·8선 이남에는 미군과 자본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은 서로 자신들의 이념과 주장대로 통일된 정부를 만들기 위해 경쟁하였다. 비록 김구 선생을 비롯한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남북 간 타협을 통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이는 수포로 돌아갔다. 남북 양측에는 각각 이승만을 수반으로 하는 ‘대한민국’과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등장하였다. 민족의 비극인 분단이 시작된 것이다.

북한은 1950년 6월 전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해 기습 남침하였다. 이로 인해 남·북한군, UN군, 중국군, 민간인 등 약 500만 명이 희생당하였다. 북한의 남침은 남한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특히 분단 고착화, 남북 간 극심한 이념대립 및 남한의 대북 불신이라는 후유증을 남겼다.

한국전쟁 실패는 북한 내 정치지형을 뒤바꿔놓았다. 김일성은 전쟁실패의 책임을 지워 박헌영 등 남로당파를 숙청하고, 무정 등 정치적 경쟁자들을 제거하였다. 전후 복구노선과 관련하여 ‘주체식’노선과 ‘소련식·중국식’노선이 충돌한 결과 소련파, 연안파 등이 숙청되었다. 소위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통해 북한 내에는 파벌이 사라졌고, 파벌이 존재하지 않는 정치지형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북한 60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주의’의 착근일 것이다. 수령주의는 주체사상의 정수로서 수령을 절대화하고 주민의 자율성을 속박하는 범전이다. 북한 주민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령의 교시를 따라야 한다. 그 결과는 정치경제적 최빈국으로 나타났다. 수령주의는 오늘날 ‘장군주의’라는 형식으로 지속되고 있다. 1994년 김일성 사후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심화된 경제난은 김일성의 권위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많은 아사자가 발생하였고, 탈북자들이 속출하였다. 여기에다 1992년 11월부터 불거진 북핵문제는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을 낳았고, ‘북한붕괴론’이 등장하였다. 김정일은 체제유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선군정치’, ‘선군사상’, ‘선군주의’라는 담론이 동원되었다. ‘김정일 장군’만 믿고 따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장군주의’가 통치담론이 된 것이다.

주체사회주의 모순의 결집체인 경제난은 북한을 대표하는 실상이 되고 있다. 사상동원에 의한 경제발전 전략은 1970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걸었고,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1990년대 초에는 그 바닥을 쳤다. 물질적 인센티브가 아닌 도덕적 인센티브에 의존하는 자력경쟁 경제는 버팀목이었던 사회주의권이 소멸되자 힘없이 무너졌고, 자연재해까지 겹쳐진 상황에서는 수십만 명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아간다’는 논리는 경제붕괴와 함께 사라지고 국제사회에 구호를 요청하는 변형이 나타났다.

세계사적 변혁인 사회주의권 붕괴는 북한의 대남정책 목표인 ‘하나의 조선’ 논리를 파괴하였다. 대세에 몰린 북한은 1991년 남북 동시 UN가입과 사실상 ‘두개의 조선’ 논리인 ‘남북기본합의서’를 수용하였다. ‘남한적화’는 커녕 자신을 보위하는 데도 벅차게 된 북한은 ‘철천지 원수’인 미국과의 대화에도 나서게 되었다. 물론 북핵폐기를 목표로 거세게 몰아붙이는 세계 최강국 미국에게 무력으로 저항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제1, 2차 ‘북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미국과의 대화는 일진일퇴를 거듭하였다. 대미 ‘벼랑끝 외교’를 펼친 북한은 외형상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미국이라는 거물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2006년 10월 핵실험이라는 최고단위 압박정책도 미국에게는 통하지 않았고 결국 핵불능화 작업을 이행해 가고 있다. 미국의 도움 없이는 자력갱생도 개혁·개방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김정일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김일성 사후 공식지도자로 등장한 김정일은 1998년부터 ‘강성대국’ 건설을 국가목표로 내세우고, 대내적으로는 ‘장사를 허용’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일본·EU 등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과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미·북간 갈등으로 인해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단시일 내에 봉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있다. 비록 금번 11월 미국대선에서 오바마가 당선되더라도 그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전향적 태도 없이는 쉽게 대북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미국인들의 여론이기 때문이다.

2012년은 북한이 강성대국의 문을 활짝 여는 해로 설정한 년도이다. 이 시기까지 북한이 경제회생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은 북한의 선택여하에 달려있다. 물론 북한도 이미 ‘실리사회주의’를 표방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핵문제, 인권문제 등으로 인해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 대화를 통해 자신이 ‘이상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그것이 되어야만 국가목표인 강성대국 건설에 필요한 지원이 확보될 것이다.

북한정권 수립 60주년을 맞아 우리도 유념해야 할 것은 ‘북한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라는 점이다. 북한은 언젠든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정책 기조로 ‘상생과 공영’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비록 그들의 ‘과거’가 우리의 가치와 정서에는 안 맞는다 하더라도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창조적 실용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 남북한 모두 환갑을 맞는 금년이 아닌가 싶다.

